

중부일보

2020년 10월 23일 (금)
01면 중첩

김포~개성 2.48km '평화도보다리'로 연결

道, 한강하구 남북 SOC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계획 수립

경기도가 '김포~개성을 잇는 평화도보다리 건설', '포구복원' 등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 구상한 남북평화 SOC(사회 간접자본)사업을 보다 구체화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한강하구 포구복원 및 교량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도가 진행한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연구를 바탕으로 한강하구에 있던 옛 포구를 복원하고 김포~개성 등 남북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한강하구는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1953년 한강에 설정한 비무장지대(DMZ)를 말한다.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이 없는 중립수역으로 민간선박 통행이 가능하지만, 군사적

대치로 70여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역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이번에 검토되는 사업 범위는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일원 및 북한 개성시 개풍군 일원 7만5천㎡ 규모다. 예상되는 다리의 길이는 약 2.48km 수준이다.

이번 용역에는 약 1억5천만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용역을 통해 한강하구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포구복원(포구마을 개발)·남북 교량(평화도보다리) 건설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또한 이를 위한 총 사업비 예산 산정, 사업추진일정, 추진계획 및 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마련한다. 이와함께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업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의 기초가 되도록 경제성 분석(B/C)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관련 법규에 따른 구체적 계획과 제도 개선 내용, 추진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활용은 문

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민선7기 경기도의 핵심 평화 사업으로 꼽힌다.

도는 지난해 경기연구원을 통해 관련 연구를 추진, 올해부터 생태자원조사, 옛 포구 역사·문화 복원, 평화도보다리 건설 등 모두 4대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번 용역은 이같은 연구 결과의 연장선으로, 한강하구 활용을 위한 남북 평화SOC분야의 구체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면 계획이 보다 구체화 되는 만큼,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지자체 협의, 중앙부처 건의, 북측과의 협의 등을 병행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연구의 연장선 개념으로,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아직 계획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연기자